

**지자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저질 우려**

산업단지내 대기과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지난 10월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됐으나 검사 요원의 태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부터 환경부로부터 성서, 염색, 달성 등 대구 지역 공단내 2천283개 업체에 대한 대기 및 수질업무 단속권을 넘겨받아 단속을 해야될 처지다.

지난 9월까지의 공단지역 밖에 위치한 1천900여개에 대해서만 단속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수가 100%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시는 현재 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는 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의 도서자료실에 소장된 환경문헌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는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도서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4개 구·군청을 상대로 업무 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규로 8명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6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오염 물질을 검사하는 연구원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들 공단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오염 여부를 검사해야할 부서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분석과(정원 7명)와 대기보전과(정원 6명)로 13명이 맡고 있다.

특히 두 부서는 이번 업무 이관으로 새롭게 1천500여개 업체씩이 추가돼 기존보다 폐기물분석과(기존 2천200여개)는 68%, 대기보전과(기존 460여개)는 무려 327%나 대상업체수가 늘어났다.

폐기물분석과는 수질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검사 등 다른 업무도 많아 실제로 수질검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많아야 3명 정도에 불과하다.

연간 단속 의뢰 건수만 해도 1천500여건(폐기물분석과), 800여건(대기보전과)으로 대기보전과의 경우 시료 채취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야만 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당초 이번 업무 이관과 관련해 10명 정도의 연구원 인력

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1명도 증원받지 못했다.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완료**

환경부는 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의 도서자료실에 소장된 환경문헌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는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도서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환경정보 이용자들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을 통해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서 발간, 소장하고 있는 7만건의 자료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59만건, 국내 학회지 80만건, 해외 전자저널 5만건 등 환경문헌정보 자료목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발간한 1,000여건의 원문DB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 환경오염 462건 적발**

부산시는 3.4분기 동안 462건의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시는 폐수의 경우 점점대상 3천 182개 업체 가운데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89개 업체를 적발했고 대기는 1천346개 업체 중 151개 업체, 소음·진동은 916개 업체 중 31개업체, 비산먼지는 1천185개 업체 중 191개 업체를 각각 적발했다.

업종별 위반률을 보면 폐수는 3.4%로 전년도 동기의 5.6%에 비해 2.2% 포인트 감소했으나 대기는 전년도 9.5%에서 올해 11.6%로 2.1% 포인트, 소음·진동은 4.9%에서 5.5%로 0.6% 포인트, 비산먼지는 7.9%에서 11.8%로 3.9% 각각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가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위 환경부 서기관 기소**

서울지검 특수3부는 지난 11월 2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환경부과장 신모(49.서기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H엔지니어링이 Y화학 등으로부

터 수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사방식 변경과 관련해 인허가상 편의를 봐주겠다고 금품을 요구, 98년 8월과 99년 6월 두차례 걸쳐 H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로부터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폐기물처리시설 도비 보조율 확대**

경기도는 단독 소각시설과 광역매립시설의 도비 보조율을 최고 21%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 11월 1일 도(道)에 따르면 소각시설 중 광역시설은 현행 보조율 25%를 유지하고,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단독시설은 21%까지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매립시설의 경우 광역은 현행 21%에서 35%로 상향조정한다.

이로 인해 단독 소각시설을 공사 중인 용인시가 19억원, 이천시 8억원, 안성시 9억원과 광역매립시설을 설치중인 남양주시 17억원 등 모두 4개시에서 53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수도권업체, 대기오염 배출 허용량 넘으면 부과금**

서울과 인천, 부천·고양·의정부·안산·용인 등 경기도 내 19개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2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로부터 초과 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 또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 적용 대상 업체끼리 할당된 배출 총량 중 일정 부분을 서로 매매·거래할 수 있게 했다. 총량 규제 대상인 대기오염 물질은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서울과 인천, 부천·고양·의정부·안산·용인 등 경기도 내 19개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2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등 4가지다.

**화력발전 먼지 피해  
첫 배상 결정**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으로 인근 농가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남 서천군 김모씨(35)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 분진 때문에 표고버섯 재배를 망쳐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발전소측에 6억4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재산피해를 일부 인정, 3932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양식장 피해 사례는 있었으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질 환경사범 5명 구속  
53명 입건**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홍준 검사는 지난 10월 30일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유를 무단방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S철강 대표 강모(51)씨와 Y케미칼 실제 경영자 최모(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Y산업 공장장 박모(41)씨 등 환경사범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철강 대표 강씨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회사내 폐수처리장의 은밀한 곳에 수중모터를 비롯해 하수도 맨홀과 연결하는 이동식 고무호스 등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약 1년 동안 다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지정 폐기물인 폐윤활유를 부정기적으로 보관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Y케미칼 최씨는 지난해 전 대표가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1여년동안 1천t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지 않고 공장부지 내에 무단방치해 주변 환경

을 오염시킨 혐의다.

Y산업 공장장 박씨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공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폐수종말처리 기준강화**

환경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를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2008년부터 2단계에 걸쳐 강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기준은 각각 현행 30ppm 이하에서 2008년부터는 20ppm, 2013년에는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농공단지도 BOD와 SS의 현행 기준인 30ppm이 2013년부터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공해 피해 120억 집단 손해소**

전북 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해이·장전·개원·미창·서흥2동 등 5개 마을 주민 1천2백여명이 단지에 입주한 14개 업체와 군산

환경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를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2008년부터 2단계에 걸쳐 강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를 상대로 1백20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주민 대표인 김경한(48)씨는 최근 “피해 조사가 끝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수십차례나 발생한 데다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할 만큼 심한 악취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군산시는 1998년 대기·수질·악취·토양오염 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주민들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를 벌여 공단 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이 검출됐으며, 주민들이 어지럼증, 구토를 할 만큼 악취가 심하고 일부 주민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주민들에게 “집단 이주와 배상 등 대책을 2001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 측은 “용역 결과가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73년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1백60여만평 크기로 조성된 이 산업

단지에는 동양화학, 대상 등 화학업종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조업 중이다.

**폐수 무단방류 30대  
골재업자 영장**

광주지검 형사3부 김용남 검사는 지난 10월 23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이모(39.광주 서구 쌍촌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골재제조 판매업체인 (주)D산업에서 발생된 폐수 8천10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모래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배출허용기준(90ppm)을 23배 초과한 2천73ppm, 부유물질량(SS)은 배출허용기준(80ppm)을 693배 초과한 5만5천490ppm 상태로 1일 평균 36t 가량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환경관리제” 정착화**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진국형 환경관리 프로그램인 “자율환경관리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으

면서 참여업체가 계속 늘어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사하구 신평동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염색조합 등 시내 7개 업체와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부산경남염색조합을 비롯, 녹산염색사업협동조합, (주)금양, (주)대우인터내셔널 부산, (주)기린, 한국신재(주) 확장공장, 만호제강(주) 등 7개사이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환경당국이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직접 환경개선목표와 계획을 세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진국형 환경관리 프로그램인 “자율환경관리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참여업체가 계속 늘어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은 자율적인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부문의 아황산가스(SO<sub>2</sub>) 먼지, 수질부문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 5개 항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의 20% 이상을 줄여나가게 된다.

이들 협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인 사업장 점검을 연1회의 환경실태진단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폐형광등 분리수거 대형건물로 확대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제도가 내년 7월부터 대형건물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제도가 내년 7월부터 대형건물로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유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형건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우선 중구와 광진, 강서, 강남 등 4개구를 대상으로 대상건물을 선정, 오는 12월부터 분리수거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7월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 병원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병원,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동안 2천892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5%에 해당하는 위반업소 102곳을 적발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시설도 포함됐다”고 지난 11월 1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귀금속, 장신구시설 30곳, 도장시설 23곳, 세차시설 18곳, 의료시설 5곳, 기타 26곳 등이 다.



**환경기술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에도 ‘환경인 회관건립 기금모금운동’ 과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은 지속됩니다.**  
**환경인들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